

## 새만금 해상풍력 면적 산정 과정 오류 발생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전북도와 갈등중인 새만금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면적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허가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의 오류를 바로잡은 후,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혜 의혹과 업무과실에 따른 기관 신뢰도 저하 등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은 당초 (주)새만금해상풍력이 풍력발전기의 지주 바다면적 기

### 새만금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줘

#### 특혜의혹 따른 기관 신뢰도 저하 논란 지속될 듯

준으로 제출한 9,764㎡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했다.

28기의 풍력발전기 1기당 357㎡를 합쳐 총 10,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만금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날개 길이 130m를 감안하면 발전기 1기당 점용면적은 1만3,200㎡이며, 28기면 37만1,462㎡에 이른다.

이는 풍력발전기가 가동되는 과정에

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또 풍력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설치되는 전력선은 별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력선 설치 면적까지 합할 경우 새만금 풍력단지 전체 공유수면점용 면적은 40만㎡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점용·사용허가 이후 사업추진계획 검토과정에서 점용·사용허가 면적 산정시 풍력발전 날개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오

류를 발견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자인 (주)새만금해상풍력에 보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주)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13일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6만1,455㎡로 재산정해 새만금개발청에 변경 신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새만금해상풍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점용·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향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검토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점용·사용허가 면적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수면 일대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은 발전기가 설치되는 최소 면적으로 국한해 특혜를 줬다고 분석했다.

공유수면점용사용료는 해양수산부 기준인 37만1,462㎡로 환산하면 600만 원 정도에서 2억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업체가 연간 2억1,9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보게 된다.

전북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수면은 관광, 환경, 항해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점사용 허가 면적을 416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바른정당, 오늘  
전북도당 창당대회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오월리5 웨딩홀(5층)에서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정운천 창준위원장과 20여명의 창준위원, 그리고 지역 유명인사들을 포함한 발기인 및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바른정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호남을 이끌어갈 전북도당의 성공적인 창당을 위한 힘찬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또, 정병국 바른정당 창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김성태 의원 등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을 응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 열린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창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운천 의원은 "앞으로 전주와 전북이 호남을 이끌어 나가는 데, 이번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가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박 대통령 등에 뇌물 공여 혐의 뇌물공여 금액은 430억원



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출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

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이 특검보는 "그간 쟁점이 된 것은 다 포함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정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적용한 430억원 뇌물공여액 중에는 이 부회장의 횡령 금액도 포함됐다. 이 역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 일부가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와 함께 적용이 검토됐던 배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조사를 마치지 않은 사항이어서 형식적 입건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 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 조사했던 부분, 특검이 조사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관련 됐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기업을 상대로 부정청탁 등 뇌물공여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를 거쳐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국

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당한 액수를 출연했고, 박근혜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SK와 롯데그룹 등을 대상으로 뇌물죄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뉴스1

### 도내 생활범죄 급증

불경기 속에 전북지역 서민들의 생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2015년 2월부터 원산, 덕진, 군산, 익산 등 4개 지역에서 1,177건의 경미한 생활범죄를 해결하고 7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생활범죄 유형별로는 차량탈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절도 90건, 점유이탈물횡령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25명, 20대 129명으로 전체의 49%가량이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사정을 대변 하듯 2013년 2,617건이던 10만원 이하 절도 범죄 건수는 2016년 3,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북경찰청은 생활범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생활범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응급 구호품 세트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안재욱